



[젠더] 글로벌 여성들에게 세계는 변했고 변하지 않았다

- 2025년 제69차 UN여성지위위원회 참석 보고

1. 일반 정보

제69회 UN여성지위위원회(CSW69)는 1995년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의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의 장이었다. 본 회의는 정부 대표, 유엔 기구, 국제 시민사회, 개발협력기관 등 1천여 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유엔본부 및 뉴욕 시내 주요 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경선언이 명시한 12개 주요 분야(여성과 빈곤, 교육, 보건,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과 의사결정, 제도적 메커니즘, 인권, 미디어, 환경, 소년 아동)에 대해 지난 30년간의 진전과 미진한 과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의 연계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분쟁 및 재정위기 등 현대의 복합적 도전 요소들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다. 셋째, 성인지 예산, 디지털 거버넌스, 젠더 데이터 등 신흥 이슈에 대해 실천적 해법을 논의하고 파트너십 기반의 국제 연대를 재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2. 핵심 메시지

- ① 북경선언 행동강령 이행 노력들은 글로벌 성평등에 대한 기여와 과제를 모두 남겼다.
- ② 기존에 주목받던 아젠다는 유지되면서, 디지털, 기후, 분쟁, 난민, 재정 등 신규 의제가 부상했다.
- ③ 글로벌 협력과 연대의 강화, 그리고 성평등 증진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3. 주요 내용

① 북경선언 30년의 회고: 진전과 한계

참가국들은 공통적으로 북경선언 이후 성평등 분야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구조적 차별과 정책 격차의 지속으로 실질적 평등은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 경제적 권한, 보건 서비스 접근성, 폭력 근절 등의 지표는 국가간 편차가 크고, 팬데믹과 보수주의로의 회귀, 분쟁 등의 요인이 퇴행적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유럽경제위원회(ECE)는 특히 고령 여성의 빈곤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문제를 강조했으며,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위원회(ECLAC)는 보편적 돌봄 시스템,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젠더폭력 대응과 사회보호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했으며, ESCWA는 정치 참여 확대와 성노동 산업 구조 해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언에서는 여성폭력, 경제 권한 부여, 구조적 성차별 제도 해소를 촉구하였다.

② 디지털 전환과 젠더 이슈

이번 회의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 젠더 평등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이다.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중 디지털 성폭력은 새로운 형태의 젠더기반폭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AI 교육 확대를 통한 여성 참여 증진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케냐는 '아지라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여성 진출을 위한 멘토링 제도 및 사이버 안전망 구축 정책을 소개하였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디지털 행정 서비스 '디아(Dia)'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한 사례를 발표하

었다. 이러한 발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국가별 맥락에 따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③성인지 공공재정 및 자원 확보

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회의에서는 OECD의 CRS 코드 중 젠더기반폭력에 관한 15190 코드의 확대 적용, IMF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신탁(RST)의 ODA 활용, 민간 재원에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요소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은 ODA 예산 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 사례를 공유했으며, 필리핀은 테크기업과의 협력 하에 디지털 성인지 예산 모델을 설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세입 기반 확충, 디지털 금융 접근성, 성인지 부채 감면 등을 포함한 '젠더전환적(gender transformative) 재정 개혁'은 페미니스트 경제학(feminist economics)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개발재원 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④국가별 정책 사례

각국의 정책 발표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ILO 협약 190 비준,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 노동시장 내 금지 직종 해제 등을 통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체로 기업활동, 노동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레바논은 여성 장관 비율 확대 및 법적 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강조하였다. 타 국가와 달리, 정치적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동에 제약이 많은 중동 국가 중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코트디부아르는 2030년까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120억 달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니는 교육·보건·경제 활동을 통한 여성 10만 명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상당한 대규모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수준이 높지 않은 두 국가의 여건을 고려할 때 ODA 등 외부의 지원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아프리카 국가이나 케냐는 고등교육 성평등과 산모 사망률 감소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등교육 성평등은 교육개발협력 측면에서는 기초·중등 교육 분야의 다음 단계로 고려되는 주제이다. 문해능력에 초점을 둔 기초교육, 기본적인 학습 능력 배양에 우선순위를 둔 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은 해당 교육을 받은 인력을 흡수할 산업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외에, 코스타리카는 기후 정책 내 젠더 통합 전략, 피지는 성인지 예

산 제도와 및 여성 리더십 강화를, 모잠비크는 성평등 보건서비스의 국가 의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ODA 대상국에 속하는 국가들이지만, 타겟으로 삼은 아젠다는 교육, 보건, 경제 등 사회안전망 수준에서부터, 기후 정책 등 최근 부상하는 주제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젠더 관점에서 자국의 전통적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 새로운 젠더 + 의제들

이번 CSW69 기간 동안 개최된 부대행사는 200여 개에 달하였으며, 이는 공식 회의 못지않게 젠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플랫폼으로 기능하였다. 부대행사는 각국 정부, 유엔 기구, 국제 시민사회, 학계, 테크기업 등이 공동 주최하였다. 다양한 주제들 중, 특히 디지털 성평등, 성인지 예산, 젠더 데이터 활용, 여성의 평화·안보 참여, 기후와 젠더의 교차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비교적 최근 주목되고 있는 현상과 젠더 간 다양한 연관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①디지털 성평등 촉진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은 물리적 폭력의 범위를 넘어섰다.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세션에서는 온라인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딥페이크 음란물 등 신종 피해유형이 분석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법적 조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필리핀은 '사이버범죄예방법'과 '안전한 디지털공간법'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은 단순히 사이버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개인 수준의 제재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안전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케냐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여성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여성을 위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EU는 디지털 기술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인지적 알고리즘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였다.

②젠더데이터와 스토리텔링 전략

UNWomen가 제기한 '젠더데이터의 시각화 및 서사화 전략' 아젠다는 개발협력기관의 성과보고 및 정책기획 업무에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의 정량적 지표에 치우친 데이터 분석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토리텔링 기반 데이터 전달'이 정책 설득력과 시민 인식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UNWomen은 남성 추과 여성 추을 구분해서 비교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이중축 차트의 남용을 지양하고 목적 중심의 시각화 전략을 설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

과 남성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종래의 문제 묘사 방식은 이제 젠더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기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떠한 차이와 차별이 어떠한 권력관계와 조응하는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 등은 단순한 '격차'의 서술 보다 평등으로 가는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다. 교차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 젠더는 다양한 주변 요인들과 연계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권력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교차성은 이러한 연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③성인지 공공재정과 부채개혁

'성평등 공공재정 개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성평등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노르웨이는 GDP의 1% 이상을 성평등 개발협력에 할당하고 있으며, 케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 의무화를 달성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성인지 부채 감면, 젠더기반 세수 정책 도입, 민간기업 참여 촉진 등을 통해 '젠더전환적 재정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ESG 연계형 젠더 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④기후위기와 젠더 교차성

'젠더와 기후위기 대응' 세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여성, 특히 농촌 및 해안지역 여성의 생계, 건강, 안전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코스타리카는 기후정책 내 젠더통합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성의 기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후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생물다양성 기금(GBFF)에 성인지적 기준을 통합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필리핀과 방글라데시는 기후재난에 대응한 젠더기반 조기경보체계와 지역여성 리더십 플랫폼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⑤평화, 안보, 여성 리더십

'여성, 평화, 안보(WPS)' 관련해서는 분쟁 상황 속 여성의 군복무, 평화협상 참여, 전후 복구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조명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여성의 군사 및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소개하며, 전시 상황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UN Women과 NATO는 군 내 성평등 교육, 여성 리더십 훈련, PTSD 대응 프로그램 등 젠더 민감한 안보 정책을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케냐와 코트디부아르도 여성 평화활동가의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대행사는 단순한 정보 공유의 수준을 넘어, 정책 실천력 제고와 국제 파트너십 강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였다. KOICA는 이와 같은

전문성과 협력 기반 논의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사업 전략과 정책 방향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KOICA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KOICA는 젠더와 다른 여러 분야의 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신규 사업 기획에 있어 다층적 함의를 제공한다. 다음 세 가지 방향은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디지털 포용을 단순한 기술 접근이 아닌 성평등 도구로 재정 의하여, KOICA의 ICT 사업 내 젠더 관련 기준선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 제안서 심사 기준과 M&E 지표 설계 시 성별 불균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성인지 데이터의 품질 뿐 아니라 그것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예컨대 젠더 통계의 시각화와 서사화 전략에 대한 직원 교육 및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젠더예산 제도의 외연 확대를 위해 재정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접근을 통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 KOICA 내부 예산편성 지침 개편 및 민간 협력모델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6. 결론

북경선언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CSW69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정책 재설계의 장이었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의 실천적 사례는 성평등이 단일한 해답이 아닌 맥락에 따라 지역과 사안에 맞춰 연계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재정, 제도라는 세 가지 교차점에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젠더 통합 사업모델, 디지털 기반 성인지 정책 프레임워크, 젠더 통계 가시화 전략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전환을 주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끝.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chsnam@koica.go.kr)